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홍 세 은 이 현 정 허 태 균[†]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따라 사람들의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X 2 (범행의도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192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처벌판단을 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각했고,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과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었지만,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어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각의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의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인을 포함하여, 처벌판단 장면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지위, 범행의도 불확실성, 고의성, 책임지각, 처벌판단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임.

이 논문은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음.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 3290-2862, E-mail: tkhur@korea.ac.kr

누군가 범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대중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한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탈세나 음주운전, 병역비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욱 크게 분노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회사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해당 행위자가 더 오래 자숙해야한다고 판단하고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하사랑, 김범준, 김민지, 2013). 이는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의 위법행위보다 높은 행위자의 위법행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의 관계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일부 연구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예, 최승혁, 허태균, 2011), 또 다른 연구들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예, Mazella & Feingold, 1994). 이와 같이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만약 위법행위를 판단할 때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실제로 다른 처벌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 사회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인식되고 판단되는지, 또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판단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수많은 연구들이 동일한 위법행위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고 판단되는지 살펴보았다. 사법 및 처벌판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한 신체적 매력도, 인종,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특성들이 양형 및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다(Devine & Caughlin, 2014; Mazella & Feingold, 1994). 이는 처벌판단이 명문화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판단에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기존 연구들은 매우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모의 배심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위법행위자보다 낮은 행위자에게 더 과실이 있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vine & Caughlin, 2014; Mazella & Feingold, 1994).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강도 살인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위법행위자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처벌판단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Freeman, 2006). 그 결과 건설노동자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고용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위법행위자가 사업가이며 MBA를 졸업하고 잘 알려진 변호사를 고용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행위자보다 더 가혹한 양형판단을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하사랑 등, 2013; Fragale, Rosen, Xu, & Merideth, 2009). 한 연구는 음주운전을 한 위법행위자가 공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하사랑 등, 2013).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공인을 인지도, 영향력, 공적인 일에 종사, 대표성, 사회적 지위 등으로 정의했

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 한 연구는 횡령범죄를 소재로 하여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또한 상해치사 범죄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지위에 따른 양형판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최승혁, 허태균, 2011).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의 관계에 대한 혼재된 결과들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처벌판단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처벌판단은 공정세상 인식(최승혁, 허태균, 2011; Lerner & Miller, 1978)이나 범죄의 전형성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공정세상 기대 수준에 따라 양형판단을 다르게 하지 않았으나 범죄자의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공정세상 기대 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더 긴 양형을 부여하여(최승혁, 허태균, 2012),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정세상 인식이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죄의 전형성 또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 측면에서 특정 범죄와 고정관념적으로 연관되는 특징을 가졌다고 지각되는 행위자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이 더 크다고 지각되거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박희찬, 김혜숙, 2010; Bodenhausen & Wyer, 1985; Willis-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이 중 한 연구에서는 유럽계 미국인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멕시코계 미국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하는 경우, 횡령범죄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보다 자동차 절도범죄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행위자가 더 무능력하고 비호감이라고 판단했다(Willis-Esqueda et al., 2008).

위 연구들을 보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조절변인을 포함한 연구들도 여전히 엇갈리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승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전형적인 횡령 범죄(박희찬, 김혜숙, 2010)만을 사용하여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전형적인 범죄만 포함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위에 따른 전형성이 없는 상해치사 범죄를 사용하여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형판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정세상 인식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최승혁, 허태균, 2011). 위와 같은 결과들은 지금까지 제안되었던 조절변인들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잠재적 조절변인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범행의도 및 책임지각에서 행위자 지위의 역할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동일범죄에 대한 처벌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행의도와 책임을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람들은 행위자가 본인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지 등을 확인하여 행위자의 범행의도와 책임

을 판단한 다음에 처벌판단을 내린다. 바이너(Weiner)의 사회행동에 대한 귀인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는 행위자가 해당 행동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각되는지, 고의성이 얼마나 크다고 지각되는지, 그리고 행동의 원인을 어디로 귀인(개인성향 vs. 상황)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Weiner, 1996). 정리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위법행위를 보면 가장 먼저 행위자의 통제력, 고의성, 귀인 등을 파악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각하며, 지각된 책임에 따라 처벌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행의도를 다르게 지각한다고 보고했다. Fragale 등(2009)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관찰자들이 그 행위의 범행의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행동의 결과에 더 많은 책임이 있으며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따라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고의성이 더 높게 지각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승혁과 허태균(2012)은 참가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를 그 지위가 낮은 범죄자보다 더 비난하고, 더 개인 성향으로 귀인하며, 더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지각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공정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들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한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세상이 공정해져야한다고 강하게 바랄수록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공정하게 변화시킬 힘이 있고 높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행위를 고의적이라고 지각하고 원인을 개인성향으로 귀인할수록 책임이 크게 지각된다는 바이너의 이론(Weiner, 1996)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일수록 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고의성과 귀인은 처벌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여부와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고의성에 대한 지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김일수, 서보학, 2008; Malle & Nelson, 2003), 처벌철학에 관한 연구 중 응보주의, 즉 복수하려는 동기에 관한 연구들 또한 범죄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판단의 주요 결정요인이며 고의성이 많이 보일수록 사람들이 행위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제안한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Darley & Pittman, 2003; Feather, 1996; Kleinke, Wallis, & Stalder, 1992; Weiner, 1996). 또한 처벌판단과 귀인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해 개인성향 귀인을 하면 더 강한 처벌판단을 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Hwang & Jeong, 2012; Maruna & King, 2009). 위 결과들을 바이너의 이론을 통해 종합하면 행위자의 행동에 고의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원인이 개인성향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 행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고 더 강한 처벌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형법에서 고의성은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잘못인지 알고 있었는지)와 인식된 결과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로 구성된다(김일수, 서보학, 2008). 즉 어떤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결과를 감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최승혁,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책임이 다르게 지각되는 경향성이 실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책임지각 및 처벌판단에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개인특성에 따라 책임지각(고의성 지각, 개인성향 귀인)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높은 사회경제적 지

위를 가진 사람의 행위가 더 부정적으로 지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편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Polman., Pettit과 Wiesenfeld (2013)는 범행의도에서 모호한 부분, 즉 불확실성이 존재해야만 인지의 편향이 드러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위법 행위에 있어 도덕적 면허(moral license)를 부여받는 데에 있어 위법행위자의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연구 2에서 판단자들은 위법행위자의 범행의도가 확실하게 제시되었을 때에는 고지위 위법행위자를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으나, 범행의도가 불확실하게 제시되었을 때에는 반대로 고지위 위법행위자를 더 관대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수행된 메타연구는 판단자들이 고지위 위법행위자보다 저지위 위법행위자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범행의도가 불확실할 때에 더 명확하게 보고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Devine & Caughlin, 2014; Mazella & Feingold, 1994). 조병철과 김혜숙(2018)의 연구는 Polman 등(2013)의 연구를 그대로 한국에서 수행하였고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더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절도 행위에 대한 시나리오로 사용했는데, 결국 이런 전형성 효과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있을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편향된 지각이 실제로 가능해도, 오직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편향 가능성이 의미있는 영향력을 발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행위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행의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각해야 하며, 범행의도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그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고의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

를 감수할 의지를 갖고 해당 행위를 했는지는 모두 행위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심적 상태이기 때문에(최승혁, 2015) 행위자의 마음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자에 대한 고의성 지각과 책임지각은 오로지 판단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추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판단자가 행위자의 심적 상태를 모르는 경우에만 고의성과 책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생기고, 비로소 판단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향이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즉, 사람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편향이 실재한다고 해도 이러한 편향은 행위자의 심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자가 행위자의 고의성이나 책임을 주관적으로 추정할 때에만 발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ragale 등(2009)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위법행위자가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 비해 고의성이 높다고 지각되어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여기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범행의도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시나리오는 탈세 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위법행위자가 탈세를 한 것이 연방세법이 복잡해진 탓에 새로운 세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세금을 과소 납부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범행의도 불확실성은 처벌판단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최승혁 등, 2009; 최승혁, 허태균, 2011)과 위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실제로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던 연구들은 범행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최승혁과 허태균(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상해치사를 소재로 구성되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직접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횡령범죄를 저지른 위법행위자가 천만 원 가량의 동업자금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표현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범행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최승혁 등, 2009).

위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범행의도가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어 편향된 고의성 지각이나 책임지각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지의 편향은 모호한 부분, 즉 불확실성이 존재해야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행의도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편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처벌판단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을 다르게 지각하는 편향이 실재하더라도 그러한 편향은 행위자의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 및 처벌판단 사이의 관계를 범행의도의 불확실성이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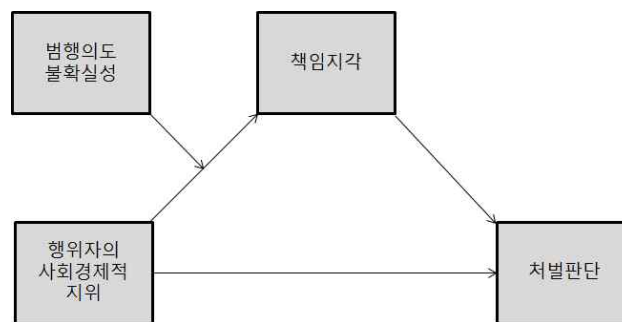


그림 1.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의 관계에서 책임지각의 매개효과가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모형

연구설계 및 가설

본 연구의 설계는 2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x 2 (범행의도의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참가자 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로 설계되었다. 매개변인은 책임지각이며 종속변인은 처벌판단이다.

가설 1. 똑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은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보다 불확실한 경우에, 지위 간 책임지각의 차이가 커지며 지위가 높은 행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간 책임지각의 매개효과를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조절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참가자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으며,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인 인바이트(www.

invight.co.kr)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0명의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이들 중 시나리오를 제대로 읽고 이해한 참여자들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시나리오에 관한 네 가지 문항(사건 발생 시각, 가해자 A씨의 검거 혐의, 피해자 B씨의 피해 정도, 가해자 A씨의 직업)에 모두 옳은 응답을 한 참여자들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8명이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192명(여성 73명)의 연구 참여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0세에서 59세까지로 평균 41.65세($SD = 9.29$)였다.

실험절차

참여자들은 위법행위(뺑소니)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고 이후 관련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시나리오는 2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 2 (범행의도의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네 가지 중 하나가 무작위로 제공되었고 연구 참여자는 해당 시나리오를 읽은 뒤 우선 시나리오의 내용을 묻는 네 문항과 조작점검을 위한 두 문항에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상의 위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지각과 관련된 통제력 지각과 고의성 지각, 귀인지각을 각각 3문항씩 묻는 9문항에 응답하였다.¹⁾ 그리고 이어서 책임지각을 직접적으로

1) 본 연구에서는 책임지각이 해당 행위에 대한 통제력 지각, 고의성 지각, 귀인지각과 연관된다고 설명한 바 이너의 귀인이론(Weiner, 1996)을 참고하여 책임지각을 직접 측정하는 것 이외에 책임지각 관련 변인들(통제력 지각, 고의성 지각, 귀인)을 함께 측정하였다. 통제력 지각 척도는 “A씨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세 개의 문항을 포함하였고 .7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고의성 지각 척도는 “A씨가 일부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88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하였다. 귀인 척도는 “A씨가 뺑소니를 한 원인이 주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45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력 지각, 고의성 지각, 귀인,

측정하기 위해 위법행위자가 해당 행위에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묻는 세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어서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 등을 포함한 처벌판단 관련 문항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나이, 그리고 가구소득과 최종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문항에 응답한 후에 설문이 종료되었다.

범죄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 즉 국회의원과 회사원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낮이를 조작하였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공인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하사랑 등, 2013)를 참고하여 국회의원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로 상정하였고,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지각되는 회사원(하사랑 등, 2013)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행위자로 상정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전형성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위법행위를 소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형성 때문에 처벌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예, 최승혁, 허태균,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박희찬, 김혜숙, 2010)를 참고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전형성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뺑소니 범죄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범죄 시나리오는 A씨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지나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부록). 범행의도의

책임지각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8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이 척도의 일부 항목에서 내적합치도가 낮고, 책임지각을 직접적으로 묻는 다른 세 문항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절약성의 원칙에 따라 이 척도의 자료들은 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일부 의미 있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불확실성을 조작하기 위해 범행 당시와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시나리오에서는 A씨가 당시 도로가 어둡고 울퉁불퉁하여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구호조치 없이 지나간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다.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의 가로등 하나가 고장으로 꺼져있었고 노후한 도로면 일부가 패여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현장을 감식한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들도 사건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범행의도가 확실한 시나리오에서는 경찰이 A씨를 검거한 후 A씨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하여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였고, 사건 당시 A씨가 차량의 달경거품에 놀라는 목소리가 녹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사건 직후 세차를 하고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측정도구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범행의도가 불확실한지 확실한지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조작되었다. 먼저 범행의도 불확실성 조작은 “위 사건에서 A씨가 일부러 뺑소니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1 = 절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라고 물어 점검했다. 다음으로 “A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1 = 매우 낮다, 7 = 매우 높다)라는 문항을 통해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책임지각(매개변인)

위법행위자가 해당 행위에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책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Wickens, Wiesenthal, Flora, & Flett,

2011). 이 문항들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위 사건에 대해 A씨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사건에 대해 A씨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씨의 뺑소니 행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세 개의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7 = 매우 많이 책임져야 한다)로 응답하게 하여 책임지각을 측정하였다. 책임지각 세 문항은 .84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보고하였다.

처벌판단(종속변인)

위법 행위자에 대해 얼마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 세 가지 측면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처벌판단은 “A씨를 얼마나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점 = 매우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 7점 =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개월에서 30년 사이에서 결정), “A씨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등 총 세 개의 질문으로 측정했다. 양형판단의 응답은 개월 단위로 코딩하였고, 보상판단의 응답은 만 원 단위로 코딩하였다. 세 개의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표준화하고 평균 내어 처벌판단 점수를 계산하였다. 표준화한 처벌판단 척도는 .7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결 과

조작점검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시나

리오를 읽은 집단($M = 4.14, SD = 1.59$)과 범행 의도가 확실한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M = 5.52, SD = 1.70$)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190) = -5.84, p < .001, \eta^2 = .152$. 따라서 범행의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작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문항에 대한 응답의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위법행위자의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M = 6.40, SD = .88$)과 낮은 위법행위자의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M = 4.13, SD = .70$)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190) = 19.84, p < .001, \eta^2 = .674$. 따라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조작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²⁾

가설검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존재했으며 처벌판단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시나리오 상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위법행위에 대해 더 책임이 있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관적인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책임지각 사이, 그리고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처벌판단 사이에는 모두 부적 상관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범행의도가 불확실할수록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덜하다고 지각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지각에 대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매개 및 종속변인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192)

| | 1 | 2 | 3 | 4 |
|------------------------|---------|----------|---------|---|
| 1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 | | | |
| 2 범행의도 불확실성 | 0 | | | |
| 3 책임지각 | .147* | -.447*** | | |
| 4 처벌판단 | .251*** | -.356*** | .674*** | |

주. 행위자 SES: 0 =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회사원), 1 =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국회의원), 의도불확실성: 0 = 확실한 범행의도, 1 = 불확실한 범행의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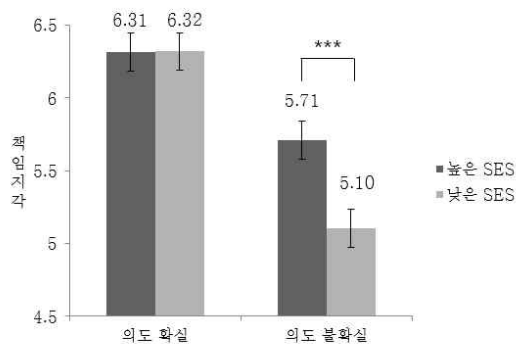
2) 바이너리의 귀인이론을 참고하여 측정된 책임지각 관련 변인들(통제력 지각, 고의성 지각, 귀인)은 예상했던 대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책임지각 변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통제력 지각, $r = .693, p < .001$; 고의성 지각, $r = .741, p < .001$; 귀인, $r = .417, p < .001$), 범행의도 불확실성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통제력 지각, $r = -.521, p < .001$; 고의성 지각,

$r = -.518, p < .001$; 귀인, $r = -.30, p < .001$). 마지막으로 책임지각 관련 변인들과 처벌판단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통제력 지각, $r = .528, p < .001$; 고의성 지각, $r = .592, p < .001$; 귀인, $r = .352, p < .001$). 이로써 책임지각 관련 변인들과 책임지각 변인이 보인 경향성이 일관된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변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F(1, 188) = 5.34, p = .022, \eta^2 = .03$; 범행의도 불확실성: $F(1, 188) = 49.58, p = .000, \eta^2 = .21$). 하지만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 188) = 5.59, p = .019, \eta^2 = .03$. 이어서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F(1, 188) = .001, p = .97$,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 188) = 10.93,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2를 통해 다시 한 번 제시하였다.

처벌판단에 대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 점수를 표준화하고 평균 내어 '처벌판단' 변인을 계산한 후,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에서 작용하는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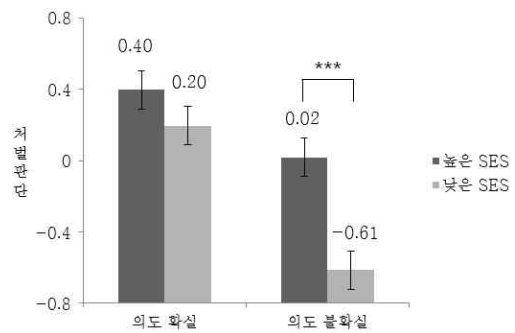
주. 그림의 숫자는 평균을,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책임지각에 대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의도불확실성의 상호작용효과

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변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F(1, 188) = 14.90, p = .000, \eta^2 = .07$; 범행의도 불확실성: $F(1, 188) = 30.07, p = .000, \eta^2 = .14$). 하지만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 188) = 4.00, p = .047, \eta^2 = .02$. 이어서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F(1, 188) = 1.73, p = .19$,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 188) = 17.18, p < .001$. 따라서 책임지각과 처벌판단에 미치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처벌판단에 대한 결과는 그림 3을 통해 다시 한 번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Hayes(2013)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주. 그림의 숫자는 평균을,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처벌판단에 대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표 2. 처벌판단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결과

| 모형 1 | 종속변인 = 책임지각 | | |
|------------------|-------------|----------|----------|
| | 계수(B) | 표준오차(SE) | t |
| 상수항 | 0.39 | 0.11 | 3.51*** |
|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A) | -0.01 | 0.16 | -0.07 |
| 의도 불확실성(B) | -1.03 | 0.16 | -6.60*** |
| A × B | 0.53 | 0.22 | 2.42* |
| 모형 2 | 종속변인 = 처벌판단 | | |
| | 계수(B) | 표준오차(SE) | t |
| 상수항 | -0.13 | 0.06 | -2.07* |
| 책임지각 | 0.62 | 0.05 | 12.11*** |
|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 0.26 | 0.09 | 2.91** |

주. N = 192, 비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지각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며,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 사이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에 해당하는 개념적 모형(Model 7)에 대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³⁾ 사이에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모형 1), $B = 0.53$, $t = 2.42$, $p = .017$. 또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했을 때 책임지각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모형 2), $B = 0.62$, $t = 12.11$, $p < .001$. 다만 처벌판단에 미치는 행위자 지위의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B = 0.26$, $t = 2.91$, $p = .004$,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1에 제

시했던 연구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변인인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와 계수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조건에서 책임지각을 매개로 행위자의 지위가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 = 0.324$, $SE = 0.11$, 95% CI[0.113, 0.547], 범행의도가 확실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B = -0.007$, $SE = 0.083$, 95% CI[-0.165, 0.157]. 그리고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조건의 조절된 매개효과 크기는 -0.007이고 범행의도가 확실한 조건의 조절된 매개효과 크기는 0.324로 범행의도가 불확실할수록 조절된 매개효과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책임지각을 통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행

3) 처벌판단은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을 표준화하여 통합한 변수이기 때문에, 처벌판단에 대한 분석 시에는 책임지각 또한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조절된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가설 2는 지지받았다. 다만, 이때 조절된 매개모형은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변인인 책임지각은 처벌판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분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과 그 과정을 책임지각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 그리고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가 회사원으로 제시되었을 때보다 국회의원이라고 제시되었을 때 행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각했고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효과는 처벌강도, 양형판단, 보상판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가혹한 처벌판단을 받는다고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들(예, 하사랑 등, 2013; Fragale et al.,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범행의도가 확실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

위에 따라 책임이나 처벌 강도를 다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나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했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확인한 책임지각과 처벌판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효과가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예, 최승혁 등, 2009; 최승혁, 허태균, 2011)의 결과가 사실은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그 연구들에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편향이 발현되지 않아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어서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책임지각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각의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없어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책임을 주관적으로 추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향이 작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고 이것이 더 가혹한 처벌판단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인 조건과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높은 지위의 행위자가 낮은 지위의 행위자보다 책

입이 더 크게 지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한국 사회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위법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다르게 지각되고 이러한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지위와 처벌판단 사이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향이 발현될 수 있는 경계조건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편향된 지각은 범행의도가 불확실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이유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 처음 도입한 범행의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수많은 개인특성들과 관련된 편향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수행되는 처벌판단 연구들이 범행의도 불확실성을 조절변인으로 활용한다면 처벌판단에 작용하는 편향을 더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 바이너의 귀인 이론을 참고하여 측정된 통제력 지각, 고의성 지각, 귀인 등의 책임지각 관련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주요 결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분석결과는 추후 연구를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고의성 지각은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적상관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책임지각과는 달리 지위와 불확실성의 상호작용 효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고의성 지각에 대해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범행의도 불확실성 조작의 주효과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고의성 지각이 범행의도 불확실성 조작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행위자 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지각과 연관될 것이라고 예

상했던 통제력 지각이나 귀인은 행위자의 지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조절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상과 달리 책임지각이 통제력 지각이나 귀인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행위자가 더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개인성향을 원인으로 돌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한다는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책임지각 사이가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편향이 왜 특별히 책임지각과 연관되는지 밝힌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할 때에는 개인마다 직업 이외에도 사회적 평판과 고정관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르게 지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저를 국회의원과 회사원으로 조작하였고, 회사원이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군을 조작한 것만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 이외의 요인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조작점검에서 회사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절대적 수치로 보면 낮은 점수가 아닌 중간 정도의 점수(7점 척도에서 4.13)가 나와 이 연구결과를 절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회사원과 국회의원 이외의 다양한 직업들을 추가적으로 조작하거나, 직업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술을 덧붙여 조작한다면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연구들은 지위 간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거나 지위가 높을수록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해온 반면, 외국연구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행위자가 가혹

한 처벌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해왔다(Mazella & Feingold, 1994). 본 연구는 범행의도 불확실성을 조절변인으로 제안함으로써 지위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와 지위가 높을수록 가혹한 처벌을 받는 연구결과는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었지만, 지위의 영향이 반대로, 즉 지위가 낮을수록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고한 외국의 메타연구(Devine & Caughlin, 2014; Mazella & Feingold, 1994)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외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큰 한국 사회(하사랑 등, 2013)에서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외국보다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종을 종종 함께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에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여하는 의미는 한국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개인특성이 각각 외국과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과 외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위가 어떤 고정관념과 연관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그 특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탐색하고 발견한 가능성을 다양한 상황에서 재확인하여 명확하게 규명할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처벌판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범죄 피해의 심각성(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Gromet & Darley, 2009)이나 범죄의 전형성(Bodenhausen & Wyer, 1985)과 같은 변인들을 통제한 채 수행되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심각한 범죄를 소재로 하거나 범죄의 전형성을 조작한 연구를 통해 이런 경우에도 범행의도 불

확실성의 조절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새로운 기점으로 하여 많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그 결과들을 통해 처벌판단에 미치는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행위자의 의도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 작동할 수 있는 편향을 밝힘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보완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을 내리는 제도이며, 따라서 이 제도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최승혁, 허태균, 2011)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 배심원의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배심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피고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편향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특히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형사사건들은 행위자의 심적 상태(위법인지 알고 있었는지, 고의를 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 없어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범행의도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편향에 주의하도록 배심원들을 교육하는 등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수, 서보학 (2008).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서울: 박영사.
-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27-49.
- 조병철, 김혜숙 (2018). 제 3자 도덕적 면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1), 1-31.
- 최승혁, 김범준, 김시업 (2009). 화이트칼라 범죄

- 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17.
-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 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3-125.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27-140.
- 최승혁 (2015). 도덕적 특성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의 상호작용.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사랑, 김범준, 김민지 (2013). 공인(公人)의 개념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용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1), 67-84.
- Bodenhausen, G. V., & Wyer, R. S. (1985). Effects of stereotypes i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267-282.
- Carlsmith, K. M., Darley, J. M., & Robinson, P. H. (2002). Why do we punish? Deterrence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284-299.
- Darley, J. M., & Pittman, T. S. (2003). The psychology of compensatory and retributive just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4), 324-336.
- Devine, D. J., & Caughlin, D. E. (2014). Do they matter?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guilt judgment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0(2), 109-134.
- Feather, N. T. (1996). Reactions to penalties for an offense in relation to authoritarianism, values, perceived responsibility, perceived seriousness, and deserving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571-587.
- Fragale, A. R., Rosen, B., Xu, C., & Merideth, I. (2009). The high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The effects of wrongdoer status on observer punishment recommendations and intentionality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8(1), 53-65.
- Freeman, N. J. (2006). Socioeconomic status and belief in a just world: Sentencing of criminal defend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10), 2379-2394.
- Gromet, D. M., & Darley, J. M. (2009). Retributive and restorative justice: Importance of crime severity and shared identity in people's justice respons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1(1), 50-57.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wang, Y., & Jeong, S. H. (2012). Public's responses to aviation accidents: the role of exemplification and attribution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40(4), 350-367.
- Kleinke, C. L., Wallis, R., & Stalder, K. (1992). Evaluation of a rapist as a function of expressed intent and remors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4), 525-537.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1051.
- Malle, B., & Nelson, S. (2003). Judging mens rea: The tension between folk concepts and legal concepts of intentionalit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563-580.
- Maruna, S., & King, A. (2009). Once a criminal, always a criminal?: 'Redeemability' and the psychology of punitive public attitudes.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15, 7-24.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 analysis.

-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15-1338.
- Polman, E., Pettit, N. C., & Wiesenfeld, B. M. (2013). Effects of wrongdoer status on moral licen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4), 614-623.
- Weiner, B. (1996). Searching for order in social motivation. *Psychological Inquiry*, 7(3), 199-216.
- Wickens, C. M., Wiesenthal, D. L., Flora, D. B., & Flett, G. L. (2011). Understanding driver anger and aggression: Attributional theory in the driving environ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7(4), 354-370.
- Willis-Esqueda, C. W., Espinoza, R. K., & Culhane, S. E.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rime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mock juro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2), 181-199.

1 차원고접수 : 2018. 07. 24.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8.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9.

Socioeconomic Status and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on Punitive Judgment

Se Eun Hong

Hyun Jung Lee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of wrongdoer's socioeconomic status(SES) and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in punitive judgment. One hundred ninety two participants were randomly exposed to one of four versions of scenarios varying in the wrongdoer's SES (high vs. low) and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high or low) and then asked to make punitive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rongdoers with high SES (vs. low SES) were more responsible and deserved harsher punishment. Of more importance, the impacts of SES on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punitive judgment were moderated by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That is, the heavier responsibility and severe punishment on wrongdoers with high SES were found only when the criminal intent was ambiguously described. It was not true in the low ambiguity context. The further analyses revealed that the impacts of SES on punitive judgment were mediated by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the mediated effect were moderated by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The results suggest the critical role of uncertainty in punitive judgment and their implications on potential biases of legal system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oeconomic status, criminal intent, uncertainty, responsibility, punitive judgment

부 록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시나리오

00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국회의원 / 사회경제적 지위 낮음: 회사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XX일 밤 9시경 집 근처 2차선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지나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에 의해 일어난 발작으로 도로 쪽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에 치인 후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끝에 국회의원 (회사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구호조치 없이 지나간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였다. A씨는 사건 당시 도로가 어둡고 울퉁불퉁하여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의 가로등 하나가 고장으로 꺼져있었고 노후한 도로면 일부가 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을 감식한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범행의도가 확실한 시나리오

00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혐의로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국회의원 / 사회경제적 지위 낮음: 회사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XX일 밤 9시경 집 근처 2차선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지나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에 의해 일어난 발작으로 도로 쪽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에 치인 후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끝에 국회의원 (회사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후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하여 삭제된 영상들을 복구한 결과, 사건 당시 차량의 덜컹거림에 놀라는 A씨의 목소리가 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를 통해 A씨가 사건 직후 세차를 하고 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건 다음날 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문의한 정황도 드러났다.